

케이뱅크, 이달 상장 예비심사... 수익성·안정성 개선 관건

1분기 당기순익 245억... 기대감 ↑
수익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IPO 성공, 수익 지속가능성에 달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IPO 성공을 위해 수익성과 안정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달 중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분부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당초 케이뱅크는 오는 2023년 코스닥 시장 입성을 목표로 올 하반기에 예비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주 총회에서 연내 IPO를 공식화 했다.

구현도 KT 대표는 지난 3월 31일 열린 제40회 주주총회에서 “올해 IPO 준비기업은 밀리의서재와 케이뱅크다”라고 말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1월 국내외 주



케이뱅크 본사 전경. /케이뱅크

요 증권사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했다. 2월에는 NH투자증권·씨티증권·JP모건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 후 현재 상장 주관사와 IPO를 위한 내부 실사를 진행 중이다.

케이뱅크는 2021년 당기순이익 225억원으로 출범 후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고 올 1분기 당기순이익 245억원

을 달성하면서 IPO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다만 시장에서는 케이뱅크의 수익성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케이뱅크의 수익 대부분이 업비트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는 지난해 총 292

억4500만원의 수수료를 케이뱅크에 지불했다. 이는 케이뱅크의 지난해 순이익(225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여·수신 규모도 증가하고 있지만 역시 업비트 영향을 받고 있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7조900억원에서 1분기 7조8100억원으로 7200억원 뛰었다. 같은 기간 수신은 11조3200원에서 11조5400억원으로 2200억원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예치금(수신잔액)은 약 5조5000억원으로 수신잔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케이뱅크의 예금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수익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재무 건전성은 여전히 취약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7.31%로 지난해 말 18.12% 대비 0.8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 19.82%에서 3분기 연속 추락하고 있다.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의 BIS비율이 36.8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BIS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케이뱅크가 1조2500억원에 달하는 증자에도 절반 이상을 재무상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해 BIS 비율개선에 실패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권 전반적으로 자본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케이뱅크도 중저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잠재적 부실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향후 이익 창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다양한 시장의 선도업체와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디지털금융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흔들리는 금융시장 ... ‘짧고 굵은’ 상품 살펴야

금리 인상 등 시장 변동성 커져
“단기로 자금 묶어두는 것이 유리”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면서 장기간 돈을 묶어두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이자를 높게 받는 ‘짧고 굵은’ 금융상품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변화에 맞춰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예·적금 가입기간에 묶여 더 좋은 이자를 선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짧고 굵은’ 금융상품으로는 파킹통장이 있다. 파킹통장은 주차를 하듯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이다. 수시 입출금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파킹통장도 예치금, 우대실적 등에 따라 책정되는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최근 파킹통장 행렬에는 저축은행이 앞장서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자산 규모 4위인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시입출식 보통예금인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



OK저축은행 ‘중도해지OK 정기예금’ /OK저축은행

금’의 기본 금리를 기준 연 0.5%에서 연 1.5%로 올려 3.35%까지 인상했다. 우대금리를 합쳐 예치금 5000만원까지 최고 연 3%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OK저축은행은 하루만 맡겨도 연 2.5% 이자를 지급해주는 ‘중도해지OK 정기예금’ 특권을 총 3000억원 한도로 진행 중이다. 만기 3년의 정기예금이지만 3회에 걸쳐 중도 해지해도 연 2.5%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 파킹통장으로 유용하다.

앞서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지난 달 25일부터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 수신상품 금리를 0.4~0.5%p

올렸다. 금리 인상에 따라 기존 정기예금 금리는 3.05%, 정기예금(인터넷) 3.15%, 회전정기예금 3.15%, 회전정기예금(인터넷)은 3.25%의 금리가 적용된다. 모두 1년 만기 기준이다.

자세히 찾아보면 저축은행 외에도 쓸 만한 파킹통장이 있다.

시중은행에선 국민은행의 ‘마이핏통장’이 최대 1.5%의 이율을 적용한다. 통장 쪼개기 기능을 제공하고 한도제한이 없다.

우리은행의 ‘우리WON파킹통장’도 1000만원까지 연 1.0%의 금리를 적용한다. 예치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하루만 맡겨도 500만원 이상이면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의 ‘토스뱅크 통장’은 연 1억원까지 하루만 예치해도 2%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들 파킹통장은 우대 금리 조건이 없어 금리를 적용받기 용이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를 최고점까지 기다리다가는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변동시장에는 단기로 자금을 묶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카드사에 부는 NFT 열풍... 판로개척 활발

블록체인기업 등 협업 증가
일각선 ‘러그풀’ 우려 목소리

세계적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카드사도 관련 사업에 진입하고 있다. NFT 거래소 개설부터 해당 카드사 상품의 NFT 발행까지 다양하게 접근하는 중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협업을 통해서만 NFT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정부 규제도 카드사의 가상자산 결제가 불가능하다. 결제가 가능한 업체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모습이다.

국내 카드사 가운데 NFT시장에 첫발을 딛은 것은 신한카드다.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블록오디세이와 손을 맞잡았다. 신한카드와 블록오디세이의 합작으로 탄생한 ‘마이넷(My net)’ 서비스는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등록할 수 있다.

우리은행

마스크 자원순환 앞장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마스크 자원순환용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부터 본점 주요 건물 4곳에 수거함을 설치해 마스크를 수거하는 마스크 자원순환 캠페인 ‘희망 리본(Re-born)’을 실시하고 있다. 수거된 마스크는 열처리 과정을 거쳐 재생 PP(폴리프로필렌)칩으로 생산돼 자원순환용품 제작에 사용된다.

또한 이번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기부하는 등반이 좌식의자 1000개는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모은 마스크와 마스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원단에서 추출한 재생 PP칩으로 생산된 자원

국민카드는 체크카드 출시를 NFT로 기념했다. 추첨을 통해 300명의 이용자에게 관련 NFT를 증정했다.

비씨카드는 NFT거래소 개설에 나섰다. 플랫폼은 블록체인기업 두나무와 협업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향후 수익배분을 약속한 뒤 NFT를 판매하고 자취를 감추는, 이른바 먹튀 사건인 러그풀(rug pull)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NFT와 관련된 제도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NFT시장 진출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카드사들도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이원덕 우리은행장(오른쪽)과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마스크 자원순환용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순환용품이다. 이 물품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산하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 1000가구에 전달된다.

이원덕 은행장은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자연과 공생(共生)할 수 있도록 자원 순환을 실천함으로써 ESG경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 당했다면 ‘채무자대리인’ 신청하세요

금감원 Q&A

불법추심 지원제도

Q. 인터넷 대출카페에서 알게 된 채권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연락 및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 수 있을까요?

A. 정부는 2020년 1월 28일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

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나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기타 법률상담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채무자대리란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 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대리의 경우,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대출 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과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은 전화 또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남영 기자